

# 특별강연 I

| 일시 2018년 10월 25일(목) 16:10 ~ 17:00 | 장소 컨벤션센터 (1F) 컨퍼런스홀



## 노 동 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원전, 길을 묻는다.

대통령의 탈핵선포 후 1년여, 한국 원자력계는 지난 5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천지·대진 등 신규원전 계획 취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그동안 발생한 굵직한 사건이었다. 그 사이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발표 등 탈원전 대선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공론화를 통해 재개되었다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견되어 왔던 것이다. 연 경제성장이 3%에 미달하고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 2% 초반대에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다. 전력수요의 낮은 증가는 신규 발전용량 수요를 감소시켜 전원간 경쟁을 격화시켰다. 이른바 전(錢)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 시기에 발생했고, 원전비리와 부실 시공·정비는 원전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정치권과 언론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으며 애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진영논리와 감성팔이가 앞서고 팩트와 논리적 사고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원간 경제성 평가, 탈원전과 원전수출 영향, 한전의 적자발생 원인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계는 그 동안 항의, 설득, 읍소를 거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반응과 냉소였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점에 맞추어 발표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의 내용을 봐도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도조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선제적 대응, 자율적 대안 제시는 불가능했는지, 에너지전환 정책은 실패로 판명나고 정책은 수정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은 없었는지 또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방관과 손가락이나 엮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원자력업계의 반성도 필요하다.

원자력계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원자력학과 선택, 연구비, 주주액 등의 급감이 압박했다. 예상되는 유일한 돌파구는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원전 수출이다. 영국, 사우디, 체코 등 유력 수출 대상국에 힘을 모아 쏘아야 한다. 정부의 적극성을 채근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다가올 고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고통스럽지만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못하면 타율적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다.

언제까지나 온실 속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